

1. 북한의 식량난, 무엇이 문제인가?

- 1) 북한 식량난의 본질
- 2) 북한 식량난의 실태
- 3) 북한 식량난의 전망

2. 대북식량지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1) 우리의 대북식량지원
- 2) 국제사회의 대북식량지원

3. 대북식량지원 협의,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나?

- 1) 대북식량지원의 추진배경
- 2) 대북식량지원 협의의 의미 및 내용

4. 대북식량지원,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1) 대북식량지원 여부에 대한 입장 및 견해
- 2) 지원방식, 식량난 발생원인 및 해결에 대한 인식

5. 대북식량지원,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

- 1) 대북식량지원의 추진방향
- 2) 대북식량지원 창구

6. 북한의 식량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 1) 북한 식량난 해결의 접근방향
- 2) 북한 식량난 해결방안

1. 북한의 식량난 무엇이 문제인가?

(1)북한 식량난의 본질

북한의 식량난은 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의 모순과 비생산성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이다.

북한의 식량난은 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의 모순과 비생산성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로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겪어야 하는 절대적인 기아의 경우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북한의 일부 지역·계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식량난의 참상은 북한내부의 식량의 분배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확보된 식량을 적절히 분배하는 경우 기근발생의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상반기중 북한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식량난은 공급의 부족보다는 중앙배급체계의 부분적인 붕괴, 식량유통체계의 마비와 함께 당·정관료들의 부패, 지방행정단위보다는 평양지역, 일반주민보다는 당·정관료와 군인에 대해 식량을 우선 배정하는 등 지역·계층간 식량공급을 차등화하는 2차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북한 식량난의 실태

국내외 주요기관들은 북한이 연간 총 200여만톤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북한 식량실태에 대한 북한 지역 내에서의 직접적인 조사 등이 어려울 뿐 아니라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서로 다른 기준과 방법으로 북한의 식량수급통계를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북한이 발표하는 각종 통계자료가 신빙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97년도 북한의 식량수급실태에 대해 국내외 주요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연간 총 200여만톤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96년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총 369만톤, '97년도 수요량을 감량기준으로 570만톤으로 보아 부족량은 약 2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96년도 생산량을 287.4만톤, '97년도 수요량을 496.6만톤, 부족량을 193.4만톤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북한의 큰물대책위원회는 '97년의 식량 부족량을 534만톤으로 주장한 바 있으나, 국제기구 등의 평가치와 비교할 때 신빙성이 희박하다.

구 분	북 한	FAO/WFP	한 국
총 생산량	250(200)	287.4	369
총 수요량	784(627)	496.6	570
부 족 량	534(427)	193.4	201
자체절약	—	—	100
실제부족			101
출 처	큰물피해 대책위 담화 (97. 2. 3)	Special Alert (97. 6. 3)	정부평가

주:()내는 정곡기준 환산치

FAO/WFP 통계불일치는 전년도 이월 등을 고려한 때문임

(3)북한 식량난의 전망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을 감안할 경우 '97년 7월 이후 금년 추수기까지 극단적인 위기상황은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절량시기에 대해서는 국내의 기관간에 다소 상이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96년도 자체생산분만으로도 추수후 8개월간('97. 6월말까지) 지탱가능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96년 12월 Special Report를 통해 자체생산분으로 7개월 동안 견뎌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평가치를 근거로 할 경우 '96년 6월말까지 북한의 총공급량은 '96년도 생산량 369만톤과 국제지원 및 수입량 66만톤을 합해 435만톤에 이르며, 실제소비량은 313만톤으로 '97년 6월말 현재 북한의 식량재고량은 122만톤으로 추정된다.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의 Special Report를 근거로 하더라도 실제 국제지원 및 수입량 66만톤을 고려하면 주민 1인당 1일 450g 소비를 가정할 경우라도 북한은 '97년 6월말 현재 59만톤의 식량재고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북한이 상반기와 같은 수준으로 1인당 350g을 소비한다고 가정할 경우 '97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북한의 식량 총수요량은 157만여톤, 총공급량은 6월말 현재 재고량 122만톤과 7월 이후 국제지원 확정량 27.5만톤을 합해 149.5만톤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97년 7월 이후 금년 추수기까지의 식량부족량은 북한 주민들에게 기초대사량에 해당하는 1인당 1일 450g을 배급할 경우 총 40여만톤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대북식량지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 우리의 대북식량지원

'95년 9월 이후 우리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북한에 제공된 대북지원 규모는 총 2억6,573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민간차원에서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우리 정부는 지난 '95년 북경에서 개최된 남북당국간 회담의 합의내용에 따라 2억3천2백만달러 상당의 쌀15만톤을 조건없이 북한에 직접 제공한 바 있으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에도 응분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세계식량기구(WFP), UN아동기금(UNICEF)을 통해 '96년 334만달러를 지원한데 이어 '97년에도 600만달러를 지원하였다.

민간차원에서는 지난 '95년 이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인도적인 대북지원이 계속되어 왔다. '95년 9월 이후 '97년 5월까지 40억원(496만달러)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하였다. 또한 지난 '97년 5월26일 남북적십자 북경대표접촉에서의 합의에 따라 옥수수 기준 5만톤의 식량(75억원, 938만달러

단위: 원(100만 원)

구 분	지원 내용	금 액	지원 경로
정부차원 '95년	쌀 15만톤	2억3,200	남북적십자간 직접전달
'96년	혼합곡물	200	세계식량계획(WFP)
	분 유	100	UN아동기금(UNICEF)
	기상자재	5	세계기상기구(WMO)
'97년	혼합곡물	600	세계식량계획(WFP)
	ORS공장비용	34	UN아동기금(UNICEF)
	옥수수·분유	1,000	세계식량계획(WFP)
민간차원 '95.9-'97.5	밀가루(3,664톤), 분유(94톤), 담요(1만개), 식용유(18.6만톤), 라면(10만개), 양말(3만5천켤레) 감자(1,940톤), 봄무종자(4.8톤), 봄배추종자(6.4톤), 옥수수(4,950톤),	496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97. 6-7	옥수수 및 가루(38,111톤), 밀가루(1,000톤), 라면(15만상자)	938	남북적십자간 직접전달
합 계		2억6,573	

상당)을 신의주, 만포, 남양, 남포항, 흥남항을 통해 지원했으며, '97년 7월 25일 남북적십자사 대표 접촉에서 옥수수 기준 5만톤의 식량을 1997년 9월말까지 추가로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95년 9월 이후 지금까지 북한에 제공된 대북지원 규모는 총 2억6,573만달러에 달하며 이중 정부 차원에서 2억5,139만달러, 민간차원에서 1,434만달러가 지원되었다.

(2)국제사회의 대북식량지원

국제사회에서도 개별국가, 각종 국제기구·단체 등을 통해 북한에 총 2억5,209만달러가 지원되었다.

국제사회에서도 UN산하기구, 국제적십자사연맹 등을 통한 대북지원 활동이 전개되어 왔다. '95년 9월부터 계속된 국제사회로부터의 대북지원은 총 2억5,209만달러(우리측 기여분 제외시 2억2,779만달러)에 달한다. UN산하기구에서는 3차에 걸친 지원계획을 통해 약 1억6,511만달러가 북한에 제공되었으며, 이 중에는 유럽연합(4,053만달러), 노르웨이(37만달러)에 의한 계획외 지원참여도 포함되어 있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해서도 약 1,872만달러(우리측 기여분 496만달러 포함)이 지원되었다. 개별국가, 국제NGO에 의한 지원도 약 6,826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는 국제선명회, 유진벨 등 국제 NGO가 550만달러, 조총련이 133만달러, 대만·중국 등 개별국가가 6,143만달러를 지원하였다.

구 분	주요 참여대상·내용	지원금액
UN산하기구 1차('95. 9-'96. 6) 2차('96. 7-'97. 3) 3차('97. 4-'98. 3) 계획외 지원	미국 222.5, 일본 50 미국 620, 일본 600, 한국 334, EU 1,737 미국 2,500, 한국 1,600, EU 2,466 EU 4,053, 노르웨이 37	약 1억6,511(우리측 1,934 포함) 930 4,169 7,322 4,090
국제적십자사연맹 1차('95.10-'96. 3) 2차('96. 4-'96.10) 3차('96.11-'97.10)		약 1,872(우리측 496 포함) 349 443 1,080
개별국가, 국제NGO	국제NGO(국제선명회, 유진벨 등) 550, 조총련 133, 개별국가(대만, 중국) 6,143	약 6,826
합 계		2억5,209

3 대북식량지원 합의,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나?

(1) 대북식량지원의 추진배경

북한에 대해서는 동포애 및 인도적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북한의 악화되는 식량난을 감안, 정부는 그동안 동포애 및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97년 3월 31일 대북지원 품목 및 참여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제단체도 대북지원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쌀을 지원품목으로 추가로 포함시켰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 지난 '97년 4월 18일 대한적십자사는 대북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하였다. 남북적십자 양측대표는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치면서 '97년 5월 26일 중국 북경에서 가진 접촉에서 제1차분 구호물자 전달에 합의한데 이어 '97년 7월 25일 북경 접촉에서는 제2차분 전달을 위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2) 대북식량지원 합의의 의미 및 내용

대북구호물자 지원은 '인도주의 정신' 과 '동포애 구현' 이라는 의미와 함께 남북적십자사를 통한 직접적인 지원통로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제1차분 전달 합의

이 합의는 약 4년 9개월만에 이루어진 남북적십자 접촉을 통해 '85년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방문 합의후 12년만에 이루어낸 남북간의 합의로서 '인도주의 정신' 과 '동포애 구현' 이라는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남북적십자사를 통한 직접지원 통로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남북한 상호신뢰를 증진하고 앞으로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좋은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합의서 타결과정에서 우리측은 그동안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의 관례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예외적인 조치로서 대표접촉 장소를 북경으로 수용하였으며, 민간단체 및 개인의 기탁에 의한 대북지원이란 점에서 지원규모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북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1차분 지원규모를 5만톤 정도로 제시, 합의서 채택이라는 결실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또한 대북지원물자 기탁자들의 요구사항 수용을 위해 노력한 결과 기탁자 이름 명기,

제공물품의 상표·표지 부착 명기, 분배대상자 및 대상지역 지정 등 요구사항 대부분을 관철시킬 수 있었던 것은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 합의서에서 채택된 내용은 몇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북측이 인도·인수 장소문제에 대해 육로수송을 신의주, 해로수송을 남포항과 흥남항으로 할 것을 고집하였으나 협상을 통해 육로를 신의주·남양·만포, 해로를 남포항과 흥남항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쌍방 합의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는데 합의함으로써 수송경로를 크게 확대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측 기탁자들의 한결같은 요구사항인 지정기탁 문제에 대해 기증자가 지원지역과 대상자를 지정하여 기탁할 경우 지정된 지역 및 대상자에게 물자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고향 및 가족에게 식량 및 물자를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은 앞으로 대북지원에서 중요한 뜻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지원물자 포장시 민간단체의 명이나 개인의 명의를 함께 표기하고 물자에 부착된 기존 상표와 사용설명서를 그대로 두기로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측의 지원 사실이 전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남측 기증자가 기탁한 지원물자 전달·전달지역 지정 합의서 제 4조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구호물자의 수량· 품종 및 인도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 량 : 옥수수 기준 5만톤 정도 ○ 품 종 : 옥수수 위주 밀가루·라면·분유·식용유 등 ○ 제1차 지원분 전달 : 1997년 7월말까지 인도·인수 ○ 제1차 지원이후 전달 : 쌍방 합의에 따라 결정
물자수송 및 인도· 인수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 송 : 육로 및 해로 이용, 쌍방합의 인도·인수장소까지 운반 ○ 수송량 : 육로(화차 20량 이상), 해로(1천톤내지 2천톤 이상) ○ 인도·인수지점 : 육로(신의주, 남양, 만포), 해로(남포항, 흥남항) * 필요시 쌍방합의에 따라 인도·인수지점 변경 또는 추가
지정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기증자가 지원지역·대상자를 지정하여 기탁할 경우, 지정지역·대상자에게 전달
분배과정 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십자사연맹 현지대표의 북측지역내 분배과정 입회 보장
물자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십자 표지와 지원단체명 또는 개인명의 표기, 물자에 부착된 기존상표와 사용설명서를 그대로 둠

● 제2차분 전달합의

이 합의에서는 국제적십자자연맹 현지 대표들이 우리측의 구호물자가 전달된 지역에 대해 분배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북한측이 물자의 구체적 분배내역(지역, 대상, 품목, 수량명기)을 구호물자 전달후 20일 이내에 문건으로 우리측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분배의 투명성을 좀 더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아가 해로 수송시 우리측의 인도인원들이 북측지역에서 체류하는 동안 숙식을 육지에서 하도록 하는 등 지난 제1차분 전달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이를 양해사항으로 합의하였다.

구 분	주 요 내 용
구호물자의 수량· 품종 및 인도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호물자 수량 : 옥수수 기준 5만톤 정도 ○ 구호물자 품종 : 옥수수 등 식량 위주 ○ 제2차 지원분 전달 : 1997년 9월말까지 인도·인수
물자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 로 : 화차량 기준 ○ 해 로 : 선상인도 방식 • 국제관례에 따름
분배과정 입회 및 분배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십자자연맹 현지 대표들이 남측의 구호물자 전달자가 전달된 지역에 대해 분배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 ○ 물자의 구체적 분배내역(지역, 대상, 품목, 수량 명기)을 구호물자 전달후 20일 이내에 문건으로 통보

합의·실시사항

- 해로 수송시 남측 인도인원들이 북측지역 체류기간중 숙식은 육지에서 하도록 함.
- 인도·인수장면, 하역장면, 검수장면에 대해 육로·해로 모두 사진촬영 및 녹화촬영 보장
- 구호물자 수송계획 및 분배결과 통보는 적십자 남북연락대표를 통해 문건으로 전달
- 자연재해, 휴일 등으로 수송기일을 어기게 될 경우, 인도·인수시기를 조정

4 대북식량지원,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1) 대북식량지원 여부에 대한 입장 및 견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남북관계의 현실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과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일반국민의 평가와 인식은 대북지원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란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북식량지원과 관련하여 2회에 걸쳐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97. 5.29, 7. 1)는 다양한 견해와 시각의 차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주류를 형성하는 인식이나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국민여론		
식량지원에 대한 평가	5월 29일	7월 1일
무조건 지원	15.0	18.9
남북관계의 현실에 따라 지원	72.9	72.3
지원할 필요없음	12.1	8.7
무조건 지원 이유		
북한동포를 도와야 하므로	70.8	70.6
북한의 급속한 붕괴방지	10.6	17.0
긴장완화와 관계개선	18.0	11.6
남북관계에 따른 지원조건		
지원자 명시 및 직접전달 가능	60.5	64.0
남북대화에 호응	25.2	22.6
북한의 적대적 태도변화	13.8	12.1
지원이 불필요한 이유		
군량미로 전용가능성	50.8	41.8
도발의도의 불포기	15.7	40.5
북한의 자구노력 미약	15.4	11.2
북한정권의 수명 연장	12.5	4.9

▶ 국민들의 응답성향은 지난 5월 29일의 조사때와 거의 변화가 없음. (여론조사기관 : 리서치 앤 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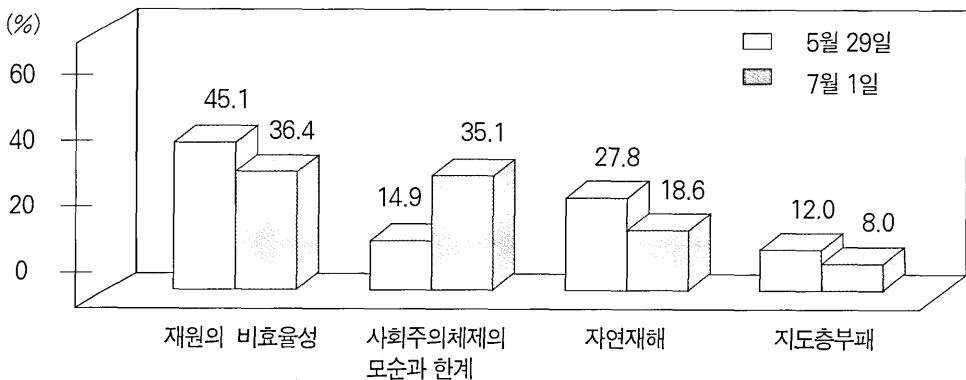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은 북한의 식량사정을 어려운 것으로 인식('97. 7. 1.)하고 있으나,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남북관계의 현실을 보아 가면서 지원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72.3%, '97. 7. 1.)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관계의 현실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는 경우에도 그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지원물자임이 명시되거나 직접전달이 가능한 경우라야 한다는 의견(64.0%, '97. 7. 1.)이 많으며, 특히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12.1%, '97. 7. 1.)중에는 균량미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은 비중(41.1%, '97. 7.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대북지원에서 우리 국민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2) 지원방식, 식량난 발생원인 및 해결에 대한 인식

대북식량지원의 방식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이 현행대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질서있게 이루어 지기를 바라고 있다.

대북식량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이 현행대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질서있게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67.4%, '97. 7. 1.)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개인이나 민간단체에 의한 직접지원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책임있는 기관에 의한 지원을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27.7%, '97. 7. 1.)하거나 현재 수준보다 낮추자는 의견(17.9%, '97. 7. 1.)도 있으나, 국민의 절반 이상(57.8%, '97. 7. 1.)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식량난의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



북한의 식량문제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과중한 군사비와 체제선전비 등 재원의 비효율적 사용때문이라는 지적과 사회주의체제의 모순과 한계 때문이라는 인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식량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남북간의 협력을 통한 북한의 농업생산성 제고라는 의견(45.3%, '97. 7. 1.)과 북한 스스로 군사비, 체제선전비 등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각(40.9%, '97. 7. 1.)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북한이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외의 원조나 지원에만 의존할 수만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표 1-10. 식량문제의 발생원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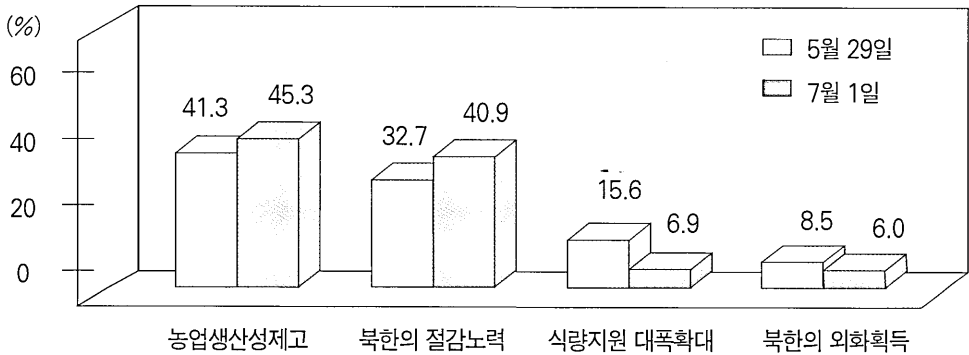


표 1-11. 식량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 (단위: %)

응답내용	%
1 군량미로의 전용방지	12.2
2 동포의식을 갖고 지원	9.8
3 조건부 지원 제도	6.7
4 북한의 자생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	4.1
5 정부차원에서 지원	3.7
6 국민의 참여기회 부여	2.6
7 남한의 경제사정을 반영	2.3
8 군사력 증강에만 급급하므로 대북지원 반대	2.3

('97. 7. 1 조사결과)

(1) 대북식량지원의 추진방향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북한 식량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유도하면서 북한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남북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하면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 식량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유도하면서 북한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남북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북측과 협의해서 시행해 나가는 한편, 북측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긴급구호차원의 식량지원도 협의해 나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대북지원요청에 대해서는 북한의 식량사정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서 지원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남북관계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한적십자를 통해 질서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지원물품을 군용으로 전용하지 않는다는 투명성을 보장하고 농업부문에서의 개혁과 군사비 감축 등 식량난 해소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취하도록 촉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대북식량지원 창구

대한적십자사는 대북지원시 그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동기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기관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적 구호단체로서 대북지원시 그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북지원과정에서 지원동기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대북지원에 있어 중요한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에 의한 대북지원은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이나 그동안의 관례에도 부합되며, 창구를 다원화할 경우 예상되는 북한의 정치적 이용가능성과 과열경쟁 등도 방지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하겠다.

(1)북한 식량난 해결의 접근방향

개방과 개혁을 통해 농업생산체제와 구조를 개편해 나가면서 남북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북한 식량문제 해결의 첩경이 될 것이다.

북한의 식량난은 자연재해 등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다. 북한의 식량문제는 외부로부터의 일시적인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장기적인 국제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지원규모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사회에 대해 식량지원을 요청하기에 앞서 보다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당국이 식량난을 해결하려는 정책적 의지와 함께 농정분야의 개혁과 농업기술개선 등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개방과 개혁을 통해 농업생산체제와 구조를 개편해 나가면서 남북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북한식량문제 해결의 첩경이 될 것이다.

(2)북한 식량난 해결방안

농업기술분야에서 남북간 협력과 함께 남북교역 확대 등을 통한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북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식량난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을 외면한 채, 군사력 증강과 체제선전에 막대한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북한은 연간 군사비에 약 56억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정치적 선전비용만 약 9억달러를 낭비하고 있는데, 10만명 이상 동원되는 대규모 종합행사도 김일성부자 생일, 당 창건기념일 등 연간 20건에 이르며, 김일성 사망 이후에도 연평균 약 13건에 달하는 정치사상적 상징물을 건설해 오고 있다. 북한이 지출하는 군사비의 3%만 줄여도 옥수수 100만톤을 구입할 수 있으며, 정치적 선전비용의 1/3만 줄여도 옥수수 200만톤을 구입할 수 있다. 북한당국이 불필요한 낭비성 지출의 일부만 줄여 북한주민을 위해 사용한다면 북한의 식량난은 상당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96년 8.15 경축사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북한식량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힌 몇가지 내용들은 북한의 식량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는 수해복구용 중장비 제공과 함께 농업기술분야에서의 남북간 협력을 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의 투자와 함께 남북교역 확대와 관광객의 북한방문 등을 허용함으로써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4자회담이 개최될 경우,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발행처 : 통일원

TEL: 901-7061

FAX: 901-7088

발행일 : 1997. 8.

편 집 : K-PRO

TEL: 263-8537

인 쇄 : 삼신인쇄 (주)
